

굳히거나 뒤집거나... 민주 당권경쟁 세대결 확산

김한길 “민심·당심 큰 흐름 거스를 순 없을 것”

이용섭 “변화의 조짐 밑바닥부터 치솟고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김 44.6% vs 이 42.2%

민주통합당 차기 당권 경쟁이 비주류의 김한길 후보와 범주류 이용섭 후보의 맞대결 구도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양 진영에서는 서로 승리를 자신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당 내외에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일화를 등에 업은 이용섭 후보가 얼마나 바람을 일으키느냐에 당권 경쟁의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는 29일 평화방송 라디오 방송에 나와 “당을 장악해온 막강한 세력이 특정후보를 뒤에서 밀고 있다는 게 사실이 아닐까 바란다”며 친노(친노무현)를 겨냥한 뒤 “민심과 당심은 큰 흐름을 거스를 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그동안 김한길 대세론이 있었지만 관세가 뒤집어지고 있다”

며 “당심의 밑바닥에서 새 인물로 바뀌어야 한다는 변화의 조짐이 용암처럼 분출하고 해일처럼 치솟고 있다”고 역전을 자신했다.

두 후보는 남은 기간 위기의 당을 재건할 혁신의 책임자임을 내세워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접촉면을 넓혀가는 한편으로 지지세력 확대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 후보는 과거 탈당 전력 등을 들며 이 후보를 ‘분열의 리더십’으로 몰아세워가며 친노, 주류 진영의 결집을 시도하는 동시에 중도 진영의 표심 흡수를 노리고 있다.

김 후보는 친노 및 주류 진영의 결집 흐름을 청산해야 할 ‘계파 정치’로 몰아가면서 혁신과 통합의 쌍끌이 전략으로 지지층 확산에 주력하고 있

다.

특히, 두 후보 진영에서는 호남 표심이 결국 당권 경쟁의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막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 진영에서는 그동안 확보한 지지 세력의 이탈을 막는 한편 막판 호남 표심을 흔들 수 있는 공약 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이 후보는 단일화 효과로 인해 충분히 역전극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호남 표심의 결집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두 후보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전면 등장에 대해 공히 ‘선(先) 자강론’을 앞세워 당심의 동요를 막는데도 주력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중심의 야권재

편론’을 내세워 ‘김한길-안철수 연대설’에 대한 친노측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는 모습이었다.

이 후보는 “안 의원 행보를 의식하지 말고 고강도 혁신을 해야 한다”며 “당이 혁신되면 ‘안철수 신당’ 창당은 어려울 것이며 그 때 안 의원에게 민주당에 들어와 새정치를 같이 하자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사저널이 최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의원과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양자 대결에서 김 후보는 44.6%의 지지를 보여, 42.2%를 기록한 이 후보에 오차범위 내인 2.4%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당명 ‘민주당’으로 확정 ‘중도 강화’ 강령도 의결

당무위, 지역구 의원 공천 여성 30% 이상

민주통합당은 29일 오전 당무위원 회를 열고 당명을 ‘민주당’으로 바꾸는 한편, 당의 강령 및 기본정책에서 중도주의 노선을 강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지역구 의원 공천시 여성을 3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당무위는 우선 이날 회의에서 당명을 현재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후보 공천 시 여성 비율의 30% 이상을 의무화하되 ‘농어촌 및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고, 광역·기초단체장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공직후보 추천 시 청년을 30% 이상 포함하도록 노력하고, 공직후보 추천 특별배려 대상에 노인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앙후보 경선에서는 대의원·권리당원의 비율을 50% 이상, 당대표·최고위원 경선에서는 70% 이상으로 해서 당비를 내는 당원의 권리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대의원으로부터 실시하던 시·도당위원장 경선에도 권리당원을 참여시키고 비율도 50%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당무위는 이어 당 강령 및 기본정책에 있어서는 그동안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한반도평화 등 3대 기조를 일부 수정했다. ‘기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 존중 및 지원’이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검토’라는 표현은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 정책의 국익 최우선 추진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적극 마련’으로 변경했다.

‘보편적 복지’라는 표현은 그대로 남겨두고 ‘복지와 함께 선순환 하는 질 좋은 성장 지향’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으며 ‘무상의료’라는 표현도 ‘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의무의료’로 바뀌었다. 한편, 당헌 개정 내용은 내달 4일 전당대회 승인을 거쳐 확정되며, 당규와 관련된 내용은 당무위 의결로 마무리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행위 ‘대체휴일법’ 도입 난항

새누리 “추가 검토해야” 민주 “당장 표결하자” 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어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하는 ‘대체휴일 도입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으나 여야간 의견차로 표결하지 못했다.

지난 19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대체휴일제 법안은 제계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일부 의원의 반발로 23일과 25일 전체회의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으며, 전날까지만 해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는 쪽으로 여야가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 논의 방안은 여야간에 거론된 여러 대안 중 하나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당장 표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과 추가 검토를 위해 당장 표결 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이에 정회 후 이뤄진 간사협의에서 새누리당은 본회의 처리가 시급한 4·1 부동산대책 후속법률인 취득세 관련법안 등 4건의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대체휴일제 법안 표결에 합의했다.

안행위는 회의를 다시 열어 약속대로 ‘민생법안’을 통과시킨 후 대체휴일제법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대체토론에서 표결 여부를 놓고 줄다끼기를 거듭했다.

김태환 위원장은 표결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끊이지 않자 결국 표결 없이 2차 정회를 선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체휴일법’ 도입싸고 여야 격돌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체휴일법’ 표결을 앞두고 여야 이견으로 정회가 선언되자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 국회의원 ‘先영장-後체포동의’ 추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정부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 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청할 때 영장 사본을 첨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현행법상 회기 중 ‘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 관

할법원 관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즉각 국회에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장을 발부받고 나서야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므로 그만큼 국회의원의 인신 구속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안을 먼저 가결하면 그 결정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면서 “또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나서 구속영장이 가각되면 국회 결정의 신뢰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불체포 특권의 포기 는 헌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영장이 발부돼 사건의 실체 판단이 끝났다면 오히려 국회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방문 재계 “경제민주화 법안 신중 처리해달라”

법안 심의 앞둔 ‘입법로비’ 논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5단체 부회장은 29일 국회를 방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들의 처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자 입법로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5단체 부회장은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만나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과잉 입법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풍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재계로서는 성장을 통해 차후에 복지나 경제민주화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 끝났다면 오히려 국회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업의 피해가 더 크다”고 지적했고, 송재희 부회장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나 노사 관련 법안은 중소기업으로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기업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적게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대기업이 불공정 근절에 스스로 앞장서면 새누리당도 경쟁력을 훼손하는 법안에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측의 이런 행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법안심의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와 본회의의 일정이 예정된 당일 오전에 국회를 사실상 ‘항의방문’한 것으로 국회를 과도하게 압박하는 ‘입법 로비’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취득세 감면 혜택

1일부터 소급 적용

여야가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의 소급 적용 기준일을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4월1일로 소급해 적용키로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면적에 관계없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안행위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취득세 감면 기준일을 당초 대책발표일인 4월1일로 했다가 다시 나올 만에 양도세 감면시기와 같은 4월22일로 변경한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비덕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미화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NPL(부실채권)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오천경매

- 비법 배우면서 투자
- 실전 사례 교육
- 1인 1물건 추천
- 단독/공동투자 가능
- 개인지도 1,100만원
- 문의 010-3605-5000